

비서관 공식에 통폐합...더 멀어진 지방분권

임기내 연방제 버금가는 자치분권 추진한다더니 청와대, 자치분권·균형발전 비서관실 통합 추진

청와대가 지방분권 업무를 담당하는 비서관 자리를 장기간 공식 상태로 비워둔 데 이어 심지어 통·폐합까지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역점적으로 진행 중인 지방분권 방침을 청와대가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청와대 내부 조직 가운데 지역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는 자치분권비서관실과 균형발전비서관실 두 곳이다. 하지만 현재 균형발전비서관의 경우 7개월째 공식인데다 자치분권비서관실에서 실무 역할을 해야 할 행정관

도 3~4명이나 비어있는 상태다. 이에 따라 청와대의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업무가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특히 청와대와 유기적인 관계속에 지역 발전계획을 수립·집행해야 하는 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등의 유관기관도 업무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가 최근 조직개편을 추진하면서 자치분권비서관실과 균형발전비서관실의 통·폐합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지방분권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의 업무가 확연히 다름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나로 줄이겠다는 발상 자체가 지방자치에 대한 이해 부족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자치분권비서관실은 재정과 사무, 인력 등 중앙의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 주민과 지역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만드는 업무를 담당하고 균형발전비서관실의 경우는 각 자치단체간의 행정·경제적 차이를 연계 및 협력을 통해 주민들의 삶에 균형있게 발전시키는 방안을 추진해 왔다.

최근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방분권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인 재정분권과 관련, 현재 8대2의 국비와 지방세 비율을 7대3으로 조정하는 사안마저 정부 부처의 비협조로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청와대

가 지역 관련 부서를 축소하는 것은 정책적 판단을 잘못하고 있다는 목소리로 커지고 있다.

육동일 충남대 교수는 "문재인 정부는 임기내에 연방제에 버금가는 자치분권을 추진해서 우리 삶을 바꾸겠다고 국민과 약속했고 국정운영계획을 통해 전략과 과제를 제시한 바 있다"고 전제하고 "이를 실행할 청와대내의 콘트를 타워가 정립이 안된 채 축소된다면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은 성공하기 어려운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자치분권비서관실과 균형발전비서관실의 통·폐합 움직임에 대해 "아직 아무 것도 결정된 것이 없다. 그의 자세한 내용은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박근혜 1심 마무리...총 징역 32년 특별비·공천개입 8년...검찰 "뇌물수수 무죄 즉각 항소"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상납받고 옛 새누리당 공천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사진)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앞서 국정농단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24년을 선고받은 상태라 형량만 합치면 총 징역 32년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지난 20일 박 전 대통령에게 국정원 특별비 수수 혐의로 징역 6년과 추징금 33억원, 공천개입 혐의에는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국정원 특별비 수수와 관련해 국고손실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뇌물수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유죄로 인정한 금액도 2016년 9월 전 달된 2억원을 제외한 33억원이다.

재판부는 국내외 보안정보 수집이나 보안업무 등 그 목적이 맞게 엄격히 써야 할 특별비를 청와대가 위법하게 가져다 쓴 것이지, 대통령 직무에 대한 대가로 전달된 돈은 아니라고 봤다. 박 전 대통령에게 특별비를 지원했다가 재판에 넘겨진 남재준·이병호·이병호 전 원장에게 '뇌물공여'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것과 같은 취지다.

재판부는 2016년 치러진 4·13 총선을



앞두고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의 공천 과정에 불법 개입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실이 친박 인사들을 당선시키기 위해 여론조사 등을 벌인 것은 비박 후보를 배제하고 친박 후보를 당선시켜야 한다는 박 전 대통령의 인식과 의지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했다.

그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이 구체적인 실행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해도 여론조사나 선거운동 기획 등은 대통령의 명시적·묵시적 승인이나 지시 하에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당시 이한구 공천관리위원장을 선임한 배경에도 박 전 대통령의 지시나 승인이 있었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1심 선고 때와 마찬가지로 이날 선고공판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이날 1심 법원이 박 전 대통령의 특별비 수수를 뇌물수수로 볼 수 없다고 판결한 데 대해 검찰은 즉각 항소를 냈다.

/연합뉴스

실행계획 구체화...단순 검토라기엔 너무도 치밀

'계엄령 문건' 뒷선 밝혀지나

국군기무사령부가 작년 3월 작성한 계엄령 문건에 대한 대비계획 세부자료가 20일 추가 공개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정국 당시 작성된 해당 문건이 실행 계획이었다는 의혹이 짙어지고 있다.

일단 군 관계자들은 차후 파장을 예의 주시하면서, 기무사 특별수사단의 수사 향방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그럼에도 군 안팎에서는 계엄령 문건 세부자료가 추가 드러나면서 '실행계획' 쪽으로 관측하는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다.

무엇보다 세부자료에 "계엄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보안유지 하에 신속한 계엄 선포, 계엄군의 주요 (킬)목 장악 등 선제적 조치 여부가 계엄 성공의 관건"이라고 쓰인 점이 실행계획이었음을 확인시킨다는 지적이 나온다. 계엄사령관의 지휘 체계를 구체화했고, 비상계엄 선포문과 계엄포고문을 이미 작성해 놓았으며, 계엄사령부 설치 위치를 명시하고, 집회 시설인 서울 여의도와 광화문에 전차·장갑차를 이용해 야간에 계엄임무 수행군을 신속히 투입한다는 계획은 실제 실행하려는 의지를 갖지 않고선 구체화할 수 없다는 것이다.

지난 6일 군인권센터가 훔쳐보지에 군 장비와 병력을 투입하려던 구체적 계획이 드러났다면, 계엄군으로는 육군에서 탱크 200대, 장갑차 550대, 무장병력 4800명, 특수전사령부 병력 1400명 등을 동원키로 계획했다는 주장이 어느 정도 뒷받침하는 것으로 보인다.

기무사의 계엄령 문건과 세부자료가, 합동참모본부가 통상 2년마다 수립하는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지난 20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계엄령 문건'의 세부자료를 공개하고 있다. 청와대는 국방부에서 추합된 '계엄령 문건'을 19일 제출받아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로 이날 일부 자료를 공개한 것이다. /연합뉴스

계엄실무편람 내용과도 확연히 다르다는 점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합참의 계엄실무편람은 통상적인 계엄령이 어떻게 발동되고, 어떤 절차 등 통상적인 매뉴얼 담겨 있다"며 "이 매뉴얼과 대비계획 세부자료는 완전히 다른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대통령이 국가정보원장에게 계엄사령관의 지휘·통제에 따르도록 지시하고 있으며 국장원 2차장이 계엄사령관을 보좌하도록 하는 국정원 통제 계획도 그냥 흘려버릴 수 없는 대목이다. 계엄사 보

도검열단 9개반을 편성해 KBS와 연합뉴스 등 모든 방송·신문·통신 등을 통제하겠다는 계획도 담겼다. 여소야대 국회상황을 고려해 국회가 계엄해제 표결을 막기 위한 강압적인 방법도 구체화했다.

특정 세력이 계엄 정국을 주도할 의지가 드러난 것도 주목할 점이다. 통상 계엄시 군령권이 있는 합참의장이 계엄사령관 임무를 수행하게 돼 있으나 기무사 계엄령 문건 세부자료에는 육군참모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하도록 한 점이다. 육군참모총장은 작전부대를 지휘하는 군령권이

없다.

당시 이순진 합참의장(대장)은 3사관학교 출신이었고 장준규 육군참모총장(대장)과 조현천 기무사령관(중장)은 물론 한민구 국방장관도 육사 출신이었던 점으로 미뤄볼 때 육사 출신들이 일을 저지르려 했던 것 아니냐는 의심도 불거지고 있다.

이처럼 계엄문건에 대한 세부자료가 공개되면서 그간 단순검토라는 주장은 논리적 근거가 희박해진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연합뉴스

문대통령 "국정원 정치적 이용 않겠다"

청사 첫 방문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일 취임 이후 처음으로 내국동 국가정보원 청사를 찾아 업무 보고를 받고 "분명히 약속한다. 결코 국정원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않겠다"며 "여러분이 충성할 것을 요구하지 않겠다"며 "여러분이 충성할 대상은 대통령 개인이나 정권이 아니다. 대통령으로 대표되는 국가와 국민"이라고 강조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어 "여러분의 국정원이 한반도의 운명과 세계사의 물줄기를 바꾸고 있다. 평창동계올림픽을 평화올림픽으로 성공시킨 주역이 됐고,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시기에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을 성사시킨 주역이 됐다"며 "이제 국정원은 '적폐의 본산'으로 비판받던 기관에서 국민을 위한 정보기관으로 거듭났다"고 언급했다. 또 "평화를 위한 대통령과 정부의

노력을 가장 앞장서서 뒷받침해주고 있고, 국제사회로부터도 실력을 인정받는 기관이 됐다"며 "여러분이 만들어낸 놀라운 변화"라고 격려했다.

문 대통령은 "오늘 국정원을 방문해서 제일 먼저 한 일이 중앙 현관에 설치된 '이름 없는 별' 조형물을 제막한 것"이라며 "이름 한 줄 남기지 못할지언정 국가와 국민을 위한 한없는 충성과 헌신이 바로 국정원의 본령이다. 본령을 지킬 수 있게 하고 지켜내는 게 이 시대에 여러분과 내가 함께 해내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국정원이) 지금까지 잘해 줬지만 갈 길이 멀다. 국내 정치정보 업무와 정치권행위에서 일체 손을 떼고 대북정보와 해외정보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며 "국정원의 본령을 지키는 것이 이 시대에 여러분과 내가 함께 해내야 할 과제"라고 말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임야·삽니다

당일 매입가능, 지분물건 환영. 010-6834-7400

부실채권 못받은 돈 회수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 차용증·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 녹취등 각종채권상담

▶ 절대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등 파악
- 실거주지파악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 전국 68개 점포로 전국가능

▶ 국가신용관리사가 직접관리 ◀

선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신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계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재산이다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상담가능)

새한신용정보(주)

010-6833-1600
직통전화 062)513-4306

사주학의 대가 동광스님비법공개

40년 내공으로 완성한 사주학 비법을 공개합니다

- 사주역학 학당 개설 -

- 일시: 매월 첫째,셋째 목요일 6시
- 장소: 광주시 동구 대인동 한미쇼핑 2층 (일월사 포교원)
- 대상: 사주학, 역학에 관심 있는 분 누구나
- 학당에 참석하셔서 새로운 사주학의 비법을 직접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포교원 (062) 524-8020
원 장 010-8024-1433

다스코진

KOSPI 상장기업 동아에스텍의 새 이름 **다스코!**

세라코진

세라믹 전문기업 동아세라믹의 새 이름 **세라코!**

태양광발전소 사업 관련 모집

- 태양광발전소 사업주 모집**
 - 태양광발전소가 가능한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분
 - 태양광발전소가 가능한 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나 설치(투자)권이 없는 분
 - 태양광발전소가 가능한 토지를 임대(임대)하고 있는 분
- 태양광발전소 영업대리인 모집**
 - 태양광발전소 부지 섭외가 가능한 분
 - 태양광발전소 사업주로부터 사명을 위임 받은 분
 - 태양광발전소가 있는 토지 소유자
- 태양광 영업 인제 모집**
 - 태양광 인제 영업 경험자
 - 태양광 영업 영업 경험자
 - 태양광 영업 영업 경험자
 - 태양광 영업 영업 경험자

지속 가능한 성장을 견인할 핵심 인재를 모집합니다!

부 문	담당업무	자격요건	근무지
다 스 코	전략기획	전략기획	화순
	신사업개발	영업	
세 라 코	수입관리	영업	나주
	생산관리 (정밀기계)	영업	

* 접수처: 담당자 062)30-237, mcs@daesco.com, 접수기간: ~ 채용시까지

프린터 벤처기업

(주) 소ريان 보청기

당사는 보청기 및 의료기기를 제조 판매하는 기술보증기금 선정 프린터 벤처기업입니다. 사세 확장에 따른 광주-전남지사에서의 근무할 열정을 가진 새로운 인재를 모집 합니다.

모집분야	직영지사 지사장(0명) 및 영업관리 담당자(0명)
근무지역	광주 및 전라남도 전역
담당업무	청각장애등급 절차 및 보조금 관련 안내 업무의 지사 조직관리
채용조건	영업관리 3개월 근무 후 평가를 거쳐 직영지사 지사장(정규직)으로 채용
우대사항	영업조직 관리 경험자 우대
지원서 접수	2018년 7월 16일(월)~ 7월 30일(월)
접수방법	이메일 접수 (주)소ريان 관리부 채용담당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jspark@sorian.co.kr 053-252-8585

SORIAN (주)소ريان 관리부